

목 차



정책 소식	17
정부, 246개 AI 응용제품 개발에 7,540억 원 지원 예정	17
지방선거 딥페이크 올리자 'Fake'...97% 정확도로 잡는다	18
입법조사처, 'AI 지방세 징수 체계' 도입 제안	19
과기정통부, 피지컬AI 선도 분야 보안 가이드라인 공개	20
"정부 서비스도 대화로 찾는다"...AI 적용한 '정부24+' 시범 서비스	21
지방재정도 AI 시대...일상 언어로 묻고 답하는 지능형 서비스 시작	22
"AI가 신고 접수"...KT, 소방청과 '차세대 119시스템' 구축	23

정부, 246개 AI 응용제품 개발에 7,540억 원 지원 예정

- 정부는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(AI)을 가속화하기 위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'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(AI스프린트)'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힘('26.3.18.)
 - 이번 사업은 기획예산처가 총괄하고 산업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국방부, 농식품부, 복지부, 기후부, 국토부, 해수부, 중기부, 식약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
 - 제조, 농·축·어업, 국토·교통 등 생활·산업과 밀접한 분야에서 단기간(1~2년) 내 시장 출시가 가능한 AI 기술 적용 제품·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
- 정부는 과기정통부, 산업부 등 10개 부처에서 총 246개 AI 제품의 개발·출시를 지원하는데 올해 AI 예산 2조 4,000억 원 중 6,135억 원을 투입할 계획
 - 올해에는 제품 개발·출시 비용을 위한 출연·보조금 4,735억 원과 융자 1,400억 원을 지원하고, 내년에는 계속사업비 1,405억 원을 지원해 2년간 총 7,540억 원을 투자할 계획

<부처별 지원 분야 및 과제>

대분류	부처명	지원 분야
제조	중기부	· 제조현장 안전, 공정·생산 자율화, 기업 물류 최적화 등
	산업부	· 각종 로봇 개발, 3D프린팅 등 제조 지능화 등
농·축·어업	농식품부	· 농산물 가격 예측, 수확방제 자동화, 농촌형 교통모델 등
	해수부	· 해양(해양 오염 정화, 항만 설계 등), 수산(수산생물 양식 등)
국토·교통	국토부	· 건설현장 안전, 차세대 물류수단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등
보건·복지·환경	복지부	· 고독사고립 등 심리케어, 고령친화사업, 만성질환 관리 등
	식약처	· 수술·진단 보조, 신체 데이터 분석 등 AI 의료기기
	기후부	· 전력 수급 예측, 폐기물 선별·분류, 기상·기후 예·경보 등
생활·보안·방산	과기정통부	· 생활 안전, AI기반 사이버·물리 보안, 홈 디바이스 등
	국방부	· 전투지원, 국방운영효율화, 사이버·보안 등

자료: 기획예산처

- 정부는 AI 모델 개발, 실증 및 양산체계 구축, 인증·지식재산권 획득 등을 위한 비용을 기업 수요에 맞게 지원할 계획
 - 또한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전시회 내 공동관 운영, 공공 조달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, 규제 개선 등 후속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힘
-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"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AI 응용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해 우리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열고, 일상과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'AI 봄'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힘

출처: 머니투데이(2026.03.18.) AI 전환 더 빠르게...정부, 246개 AI 응용제품 개발에 7,540억 지원

지방선거 딥페이크 올리자 'Fake'...97% 정확도로 잡는다

- 정부가 6·3 지방선거를 겨냥한 딥페이크(인공지능 합성기술) 영상·음성 조작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행안부·국과수의 도움을 받아 최첨단 인공지능(AI) 탐지 모델을 현장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힘('26.3.10.)
 - 이번 조치는 최근 특정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모습이나 발언을 조작한 허위 정보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됨
 -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선거 기간 딥페이크 영상 삭제 요청은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388건에서 지난해 제21대 대선 당시 1만 510건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
 -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"딥페이크는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정보 범죄"라며 "지방선거를 앞두고 AI를 악용한 허위정보 확산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"이라고 언급
- AI 탐지 모델은 영상의 전체 흐름을 분석하는 '전역 분석'과 얼굴 등 특정 부위의 조작 흔적을 정밀하게 판별하는 '국소 분석'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를 높인 것이 특징
 - 박남인 국과수 연구관은 "기존 모델은 얼굴 중심으로만 탐지할 수 있었지만 새 모델은 얼굴 외 영역에서도 조작 여부를 탐지할 수 있다"며,
 - "단일 모델 기준 탐지 정확도는 약 92% 수준이지만, 여러 모델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구조를 적용하면 최대 약 97% 수준까지 성능 향상이 확인됐다"고 언급
 - 해당 모델은 영상뿐 아니라 음성까지 함께 분석하는 '멀티모달 방식'을 적용해 인터뷰 영상이나 연설 영상 등에서 일부 음성만 조작된 경우에도 탐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됨
 - 예를 들어 전체 영상 중 특정 구간의 음성만 변조된 경우에도 해당 구간의 이상 패턴을 분석해 추가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과수의 설명
- 행안부와 국과수는 앞으로 AI 탐지 모델의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
 - 또한 성평등가족부, 방송통신위원회,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촘촘한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
 - 윤호중 장관은 "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 과정에서 허위·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꾸준히 높ی겠다"며 "이번 기술을 각종 디지털 범죄 수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"고 밝힘

출처: 뉴시스(2026.03.10.) 지방선거 딥페이크 올리자 'Fake'...97% 정확도로 잡는다

머니투데이(2026.03.10.) '정확도 97%' AI로 가짜 영상 잡는다...정부, 선거 딥페이크 전면전

입법조사처, 'AI 지방세 징수 체계' 도입 제안

- 국회입법조사처(NARS)는 '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 징수 효율화 방안' 보고서를 통해 현행 인력 중심의 수작업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하며, AI 기반의 자동 분류와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('26.3.4.)
 -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2020년 3조 3,263억 원에서 2024년 4조 4,133억 원으로 5년 사이 32.7% 급증한 상황
 - 특히 2024년 기준 체납 징수율은 약 28%에 불과해, 체납 10건 중 7건 이상이 해소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
 - 세목별로는 경기침체에 민감한 지방소득세가 1조 6,90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, 재산세(8,399억 원), 자동차세(7,050억 원)가 그 뒤를 이었음
 - 지역별로는 경기도(1조 4,044억 원)와 서울시(1조 287억 원) 두 곳의 체납액이 전국 합계의 55%를 차지하며 심각한 집중 현상을 보였음
- 입법조사처는 지금까지의 징수 방식이 인력 중심의 수작업과 사후적·획일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
 - 방대한 체납 자료를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분석하다 보니 정밀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, 징수 성과가 담당자의 경험이나 주관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분석
- 입법조사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'AI 기반 체납자 자동 분류체계' 도입을 제안
 - 'AI 기반 체납자 자동 분류체계'는 과거 납부 이력과 소득·재산 정보를 AI가 학습해 체납자의 납부 가능성 점수를 산출하고, 이를 1~10등급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사용
 -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▲저위험군은 모바일 알림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▲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와 연계하며 ▲악성 고위험군에게는 가택 수색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우선 적용하는 등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짐
-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'지방세 체납 빅데이터 센터' 신설을 제안한 상태
 - 류영아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"AI와 빅데이터 기반의 표준화된 시스템은 지자체 규모와 관계없이 징수 역량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"이라며
 - "다만 민감 정보를 다루는 만큼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보안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"고 강조

출처: 뉴스버스(2026.03.04.) "AI가 체납자 잡아내야"...입법조사처, 'AI 지방세 징수 체계' 도입 제안

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피지컬 AI 선도 분야 보안 가이드라인 공개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스마트선박, 우주, 로봇 분야에 특화된 보안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('26.3.5.)
- (스마트선박) 선박의 디지털화와 자율운항 기술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, 선박 시스템뿐 아니라 해운사 운영과 선원 활동 전반에서 보안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
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대형 해운사가 함께 참여하여 국제 규제와 민간 표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실무형 기준인 ▲해운사 특화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, 현장 인력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▲보안 인식 제고 교육교재, ▲선박 부착용 8대 보안수칙을 제작하였음
 - 특히 교육교재는 사고 사례부터 예방 행동, 보완 조치까지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으며, 선박 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포스터 형태로도 제공되어 인적 보안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- (우주) 위성 제작·발사·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과 서비스가 결합되며, 공급망·운영 환경 전반에서 새로운 보안 위협이 확대되는 상황
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에 공개한 우주 분야 자료는 총 2종으로, ▲최신 운영환경을 반영한 우주 보안모델 ▲체크리스트 기반의 상세 가이드를 담은 우주 보안모델 해설서로 구성
 - 보안모델에서는 우주 분야 글로벌 보안 규제를 반영한 총 53개 항목의 우주 보안 체크 리스트를 제시하였으며, 국내 우주 기업 담당자가 실제 현업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우주 산업의 안전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- (로봇) 피지컬 AI의 대표주자인 로봇은 제조·서비스·의료 등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, 이에 대한 유럽, 북미 등 사이버보안 글로벌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상황
 -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하는 로봇 사이버보안 자료는 총 2종으로, ▲기존 로봇 보안 모델의 고도화 버전 ▲로봇 보안요구사항 해설서로 구성됨
 - 이를 통해 기업은 로봇 제품의 개발과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손쉽게 안내 받을 수 있으며,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
-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“선박, 우주, 로봇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도 사이버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”이라며,
 - “이번에 공개하는 특화 보안 매뉴얼이 기업의 보안 내재화 부담을 낮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보안 기준 대응에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”고 언급

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(2026.03.05.) 과기정통부, 피지컬 AI 시대 선도할 선박·우주·로봇산업 분야 특화 보안 매뉴얼 공개

"정부 서비스도 대화로 찾는다"...AI 적용한 '정부24+' 시범 서비스

-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(AI) 기능과 서비스 연계를 대폭 확대해 국민이 보다 쉽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'정부24+'를 개편했다고 밝힘('26.3.8.)
 - '정부24+'는 "이사했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?", "아이가 태어났는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?"와 같이 질문하면 시가 질문의 의미를 분석해 필요한 서비스와 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음
 - 질문이 모호할 경우 추가 질문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해 처음 이용하는 국민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
- 이번 개편으로 민원 신청 방식도 바뀔 예정
 - 이용자들은 기존처럼 복잡한 메뉴를 찾거나 행정 용어를 이해할 필요 없이, '정부24+'를 통해 자연스럽게 묻고 답하는 '대화 중심'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
 - 국민신문고 고충·건의 민원,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등 50종의 서비스는 정부24+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해졌으며,
 -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513종 서비스는 정부24+에 한 번 접속하면 추가 로그인 없이 각 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되었음
 - 또한 이전에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이력을 활용해 바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'원클릭 민원 발급', 출산·결혼·이사 등 삶의 변화에 맞춰 필요한 민원과 혜택을 안내하는 '인생여정 생활가이드'가 새롭게 제공되었음
 - 이와 함께 고령층을 위한 간편 전용 화면을 도입하고 모바일 앱에서는 토지대장·생활기록부·주민등록초본 발급 등 입력 절차가 복잡한 민원의 신청 단계를 간소화하였음
- 행안부는 향후 시와 대화하면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는 '대화형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'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
 - 해당 서비스는 주민등록등·초본, 토지대장 등 발급 수요가 많은 민원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될 예정
-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"이제 정부 서비스도 검색이 아니라 대화로 이용하는 시대가 열렸다"며,
 - "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'찾아다니는 정부'가 아니라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AI 기반 정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"고 언급

출처: 뉴스1(2026.03.08.) "정부 서비스도 대화로 찾는다"...AI 적용한 '정부24+' 시범 서비스

지방재정도 AI 시대...일상 언어로 묻고 답하는 지능형 서비스 시작

-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(AI)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('26.3.15.)
 - 행안부는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(정책도움e)에 AI 기반의 '지방재정 지능화 서비스'를 1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힘
 - 이번 서비스는 2008년부터 축적된 지방정부의 재정자료와 지역 경제·사회 정보를 한곳에 모은 공무원 전용 플랫폼에 거대언어모델(LLM) 기술을 접목한 것이 특징
-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도 어려운 전문 용어와 복잡한 검색 방식 때문에 현장 공무원이 정보를 빠르게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
 - 행안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사업비 약 11억 원을 들여 지난해 8월부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화 플랫폼을 구축했으며, 이번에 공개되는 서비스는 3종으로 구성됨
 - '지방재정365 검색 서비스'는 사용자가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통계 자료를 분석해 표나 그래프로 시각화해 답변하는 기능을 갖춘
 - '재정용어 및 제도자동해설 서비스'는 재정자립도와 같은 전문 용어를 법령과 해설집을 토대로 알기 쉽게 풀어주는 기능을 탑재함
 - 또한 '지역특화 서비스'는 유사 사업을 비교·분석하거나 성과지표를 추천하는 기능으로 공무원의 정책 기획 업무를 돕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
- 시범 운영은 권역별로 점차 확대될 계획
 - 16일 서울·경기권을 시작으로 23일에 충청·호남권, 30일에 경상·강원·제주권 순서로 적용될 예정
 - 행안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힘
-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“이번 서비스는 복잡한 재정 정보를 공무원이 일상 언어로 쉽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‘지방재정 AI 전환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”이라며,
 - “생성형 AI가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과학적 정책 결정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”고 언급

출처: 이데일리(2026.03.15.) 지방재정도 AI 시대...일상 언어로 묻고 답하는 지능형 서비스 시작

"AI가 신고 접수"...KT, 소방청과 '차세대 119시스템' 구축

- KT는 소방청의 '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ISMP(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) 수립' 사업을 수주했다고 발표('26.3.18.)
 - 해당 사업은 전국 19개 시·도 소방본부에서 각각 운영 중인 119 신고접수, 출동지령, 상황관제 시스템을 AI와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 단위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상위 기획 사업으로,
 -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코넥, 브이티더블유, 넥스트아이앤아이, 엠티데이터 등과 함께 세부 시스템 설계와 추진 전략을 마련할 예정

<소방헬기가 익수자를 구조하는 모습>



자료: 뉴스1

- 향후 구축될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은 AI 음성인식 기반 신고접수, 전국 통합 GIS(지리 정보시스템), 다매체·영상·IoT 자동신고 등을 핵심 기능으로 하고 있음
 -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 폭주 상황에서도 긴급도를 자동 분류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, 대형·복합 재난 발생 시 전국 소방력의 효율적 동원과 지휘가 가능할 것으로 소방청은 전망하고 있음
 - KT는 ISMP 수립 과정에서 무중단 운영 체계와 재해복구 센터 구성 방안, 데이터 통합·표준화 전략을 제시해 시스템 안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며,
 -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·제도 개선 사항과 조직·운영체계 개편 방향도 함께 도출할 예정
- 유용규 KT 엔터프라이즈부문 공공사업본부장 전무는 "차세대 119통합시스템 ISMP 수립 사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국가 핵심 안전 인프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"이라며,
 - "KT는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소방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재난 대응 체계를 구현해 나가겠다"고 밝힘

출처: 뉴스1(2026.03.18.) "AI가 신고 접수"...KT, 소방청과 '차세대 119시스템' 구축